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법적·제도적 기제이다. 법철학적 관점에서 선거의 정당성은 최다 득표자의 당선이라는 실질적 결과만으로 확립되지 않으며, 선거의 전 과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충족하였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물리적 기반은 국가의 공공 행정력이다.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확보, 투표 물류의 적시성 유지, 현장 관리의 일관성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집행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실체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적 권리와 구체적인 행정적 집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선거는 예측 가능성과 보편성을 상실하여 근본적인 정당성 균열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정적 결함은 단순히 실무적 오작동의 차원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원인이 된다. 특정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이나 선거인명부 누락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투표 마감 시간의 불균형이나 집계 기구의 사후 통제력 상실은 국가 행정이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투명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집행의 불완전성은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 관계를 심해시키며, 선거 결과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행정적 기능부전의 배경에는 '제도적 독립성'과 '행정적 책임성' 간의 내재적 긴장이 존재한다. 선거 관리 기구에 부여되는 강력한 독립성은 외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선거의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단벽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독립성이 외부의 감시와 사법적 견제를 차단하는 차폐막으로 오용될 경우, 기구 내부는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유인을 상실하고 '제도적 관성'에 안주하게 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이 관료적 무능을 은폐하는 정당화 기제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헌법적 지위와 실질적 행정 역량 간의 단절인 '구조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도된 책임성의 공백은 선거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절차적 결함이 발생한 선거의 사후 효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대립한다. '절차적 완벽주의'는 미시적 절차의 흠결이 거시적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오염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행정적 과실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면 해당 선거는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질적 보존주의'는 행정적 결함의 규모가 전체 당락의 결과를 바꿀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선거 자체의 거시적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미시적 결함을 선거 전체의 무효 사유로 삼기보다, 사후적 제도 개혁이나 개별적 구제 절차를 통해 치유하는 것이 체제의 지속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현대 선거 제도는 절차의 엄밀성과 결과

의 실질적 유지라는 두 가치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운용된다.

(나)

선거 행정의 부실은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가시적 물류 실패에 국한되지 않으며, 집계 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의 통계적 무결성 의혹으로 확장된다. 현대 선거 행정의 신뢰성은 각 선거구와 투표소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확률적 독립성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유권자의 지리적 분포, 거주지의 연령대,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지향성이 상이한 독립된 선거구들 사이에서는 투표 집계 데이터의 무작위성(randomness)이 보장되어야 정상적인 선거로 간주된다. 즉, 정상적인 선거 환경 하에서 개별 선거구의 투표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지 않고 독립된 확률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들 간의 거시적 통계 수치가 인위적인 대칭성을 형성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영(0)에 수렴한다.

그러나 특정 선거의 사전투표 집계 과정에서 서로 다른 독립적 선거구 간의 관내 사전투표수 대비 관외 사전투표수의 비율이나 특정 후보의 득표 비율이 소수점 아래까지 수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통계적 동일성' 현상이 관측될 수 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확률적 변동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통계적 이상징후**로 규정된다. 자연적 상태에서 발생하기 극히 어려운 데이터의 비정상적 수치 일치성은, 선거 행정 시스템 내부에 인과적 왜곡이나 기계적 연산 오류, 혹은 데이터 처리 과정의 인위적 개입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통계적 이상징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검증론의 두 축인 '사전적 검증성'과 '사후적 감사 가능성' 간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선거 행정 시스템의 내부 알고리즘이나 전산망의 데이터 이동 구조가 외부 유권자와 검증 주체에게 불투명하게 차단되어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극대화된다. 내부 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후적으로 산출된 집계 표에 대한 단순한 외형적 검사만으로는 그것이 자연적 표심의 수렴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가공의 결과물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 즉, 시스템 내부의 폐쇄성이 유지되는 한 사후적 감사는 실효성을 잃고 무력화된다.

따라서 현대 규제법학에서는 선거 관리 기구의 면책적 권위나 제도적 성역화에 안주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시스템 내부의 처리 전 과정을 상시 개방하는 '구조적 투명성'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통계적 무결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 계약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선거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행정 기구가 지닌 조직적 독립성의 보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연산 과정 전체에 대한 사법적·시민적 접근 가능성이 동시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선거의 실질적 결과가 지닌 우위성을 구체화하고, (나)

- 는 선거 결과의 통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 모델을 대조하고 있다.
- ② (가)는 행정적 결함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인과를 규명하고, (나)는 이를 데이터의 통계적 무결성 및 시스템적 구조적 투명성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하고 있다.
- ③ (가)는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이 지닌 순기능을 전면 부정하고, (나)는 독립성의 극단적 강화를 통해 통계적 이상징후를 사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 선거 제도 개혁 사례들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며, 민주주의 체제가 도달해야 할 완벽한 정당성의 최종 종착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사후적 규제 절차의 완벽성을 자율적 시장 통제 기제와 매칭하여 설명하고, (나)는 관료적 자의성이 유도하는 데이터의 비선형적 팽창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5. (가)와 (나)의 핵심 전제를 바탕으로, <보기>의 행정학적 지표와 가상 사안을 분석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행정학계와 법조계는 선거 관리 기구의 행정 역량과 절차적 정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 행정 건전성 비율’ 지표를 도입하고, 최근 부실 선거 논란이 일어난 가상의 X 선거 관리 기구 현황을 표로 집계하였다.

- 선거 행정 건전성 비율 = (유효 집행 자산 / 위험가중 부실자산) × 100 (%)
- * 유효 집행 자산 = 정상 투표용지 확보량 + 선거인명부 대조 무결성 점수
- * 위험가중 부실자산 = ∑ (부실 요인별 발생 건수 × 요인별 위험 가중치)

[X 선거 관리 기구의 행정 현황]

- 유효 집행 자산: 정상 투표용지 확보량 60 / 선거인명부 대조 무결성 점수 40
- 부실 요인 및 발생 건수:
 -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 10건 (위험 가중치 1.0)
 - 통계적 이상징후(사전투표 비율 동일): 5건 (위험 가중치 2.0)

현행 규제안에 따르면,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저 행정 건전성 비율 기준은 10%이다. 사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적 이상징후’의 위험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관료적 타성으로 인해 ‘선거인명부 대조 무결성 점수’가 기존 40에서 절반인 20으로 감소하는 새로운 행정 지침을 전제하였다.

- ① 현 상태에서 X 기구의 선거 행정 건전성 비율은 최저 기준인 10%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므로, [가]의 실질적 보존주의 관점에서는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기보다 거시적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새로운 행정 지침이 도입되면 위험가중 부실자산이 감소하는

- 속도가 유효 집행 자산이 잠식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X 기구의 최종 선거 행정 건전성 비율은 조치 전의 기존 건전성 비율보다 오히려 상승하겠군.
- ③ 새로운 행정 지침 하에서 현장의 행정 관리 부실이 심화되어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가 기존 10건에서 20건으로 증가한다면, 분모를 구성하는 위험가중 부실자산은 조치 전인 기존 현 상태의 총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행정 건전성은 악화되겠군.
- ④ 새로운 행정 지침 하에서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왜곡으로 인해 ‘통계적 이상징후’의 발생 건수가 기존 5건에서 20건으로 폭증하더라도, 하향 조정된 위험 가중치 덕분에 새로운 위험가중 부실자산은 조치 전 기존 현 상태의 위험가중 부실자산 총량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겠군.
- ⑤ 사법부가 도입한 외부 감시 제도는 [나]에서 지적한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사후적 감사 가능성’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 계약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볼 수 있겠군.

6. (나)의 ‘확률적 독립성’과 ‘무작위성’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윗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 행정의 무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리적 분포나 연령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로 작용해야 한다.
- ② 정상적인 선거 환경이라면 서로 독립적인 선거구들 사이에서 거시적 투표 집계 데이터가 인위적인 대칭성을 형성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한다.
- ③ 선거 행정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의 폐쇄성이 유지되더라도, 사후에 산출된 집계 표에 대해 외형적인 정밀 조사를 집행한다면 인위적인 가공 유무를 완벽히 식별할 수 있다.
- ④ 데이터 검증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배경은 내부 전산망의 데이터 이동 구조가 외부의 검증 주체에게 투명하게 개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⑤ 현대 규제법학이 구조적 투명성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통계적 무결성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7. (가)의 ‘구조적 디커플링’을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정치학자 X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표용지 부족이나 명부 누락 등의 행정적 부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해당 기구의 헌법적 독립성을 절대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기구에 대한 사법부의 사후 감찰이나 외부의 감시 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관료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성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조직 내부의 경직성과 집행의 불완전성은 자발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 ① 학자 X의 주장과 달리, 외부의 사법적 견제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절대화하는 조치는 관료적 무능을 은폐하는 정당화 기제로 작용하여 책임성의 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 ② 학자 X의 주장과 달리,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조직의 실질적 행정 역량을 비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법적 권리가 구체적인 집행을 압도하는 주객전도 현상을 유발한다.
- ③ 학자 X의 주장과 달리, 내부 관료제의 관성은 정치적 개입의 총량이 감소할 때만 발생하는 임시적 현상이므로, 외부 감시를 차단하는 처방은 미시적 결합이 거시적 정당성을 오염시키는 시차를 늘릴 뿐이다.
- ④ 학자 X의 주장과 달리, 외부 감찰을 차단하게 되면 입법자와 집행 관료의 재량이 원천적으로 박탈되므로 형식적 합법성의 외피조차 갖추지 못한 통계적 이상징후가 현실화되는 원인이 된다.
- ⑤ 학자 X의 주장과 달리, 집행의 불완전성은 시장의 자율 조정을 공공의 자의적 통제가 압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 특권의 부여는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 관계를 영구히 종식시킨다.

8. (나)의 [통계적 이상징후]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전투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당해 선거에서 지리적 환경과 유권자 구성(연령, 소득 등)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명된 세 선거구(갑, 을, 병)의 사전투표 결과 집계 표이다.

선거구	관내 사전 투 표 수 (표)	관외 사전 투 표 수 (표)	관내 대비 관외 투표 수 비율	A 후보 득 표 율 (%)
갑 선거구	40,000	10,000	25%	55.32%
을 선거구	60,000	15,000	25%	55.32%
병 선거구	80,000	20,000	25%	55.32%

* 단, 세 선거구의 총 유권자 수와 투표 참여자 총량은 서로 상이하며, 소수점 아래 수치들은 통계적 반올림 오차를 제외한 실제 집계 결과임.

- ① 각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과 지리적 환경이 상호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세 선거구의 관내 대비 관외 투표수 비율이 모두 25%으로 일치하는 현상은 윗글에서 언급한 '통계적 이상징후'로 규정할 수 있겠군.
- ② 세 선거구의 실제 투표수 총량이 서로 상이함에도 A 후보의 득표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55.32%)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통계적 동일성'은, 투표 집계 데이터의 무작위성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이겠군.
- ③ 윗글의 관점에서 독립된 선거구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인위적인 데이터 대칭성이 관측되는 현상은, 선거 행정 시스템 내부에 기계적 연산 오류나 인과적 왜곡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④ 만약 <보기>의 데이터 일치 현상이 행정적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추상적인 민주적 권리가 구체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 올바르게 실체화되지 못했음을 증명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에 균열을 유도하겠군.
- ⑤ <보기>의 통계 자료가 지닌 비정상적 동일성은, 선거 행정의 무결성이 '각 선거구와 투표소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확률적 전제 조건 위에서만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군.